

靑, 협치내각 철화... 의원입각으로 선회하나

앞당겨진 개각 시점 감안 국회 청문회 검증 부담 ↓ 김동연 부총리 유임 유력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주요 콘셉트로 내세웠던 '협치내각'을 사실상 자진 철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단행할 개각은 다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한한 '의원입각'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협치내각과 관련해 "다른 야당이나 정당, 정치권에서 좋은 인물이 있으면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협치내각은 국회

에서 협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각에는 협치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 여당이 추진할 주요 법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가운데 일부를 입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구상해 온 협치내각의 골자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협치내각의 방향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를 함께 일할 분들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상황들을 종합하면 지난 7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뒤, 협치내각을 명분으로 야당과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만 해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탄탄하게 받쳐주던 상황이라 청와대 안팎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을 알리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폭의 개각이 아닌, 3~4곳의 꼭 필요한 자리만 교체한다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등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최근 고용소극 상황까지 더해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개각 시점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의원입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7명의 여당 의원 입각 사례에서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역대 장

관들의 평균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 입각한 장관의 경우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개각도 여당 의원들 위주로 꾸러질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었고,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과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추진로 상징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의식해 경제부처 장관 일부 교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부총리를 경질할 경우 자칫 경제실정을 일단 유임시켰던 것처럼 김 부총리를 제외한 경제부처 장관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를 제외한 경제부처 장관 범 위에는 통상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송성환 도의장 '총효대상' 수상



송성환(사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18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총효대상 시상식'에서 전북정지발전공로 대상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며 지방의정 및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뜻밖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을 빛낸 대한민국 총효대상 조직위원회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한다. /김진성 기자

은산분리 밀어붙이기 비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자본보유 제한) 규제완화 반대를 주장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기막힌 협치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며 여야 다수당의 관련 법안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위 진행 흐름을 보면 (은산분리 규제완화) 은도차는 있지만 이미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등 주로 금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제1소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욱·유동수·이학영·정재호·최운열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소위위원장인 김종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진태·성일석 의원이 참여한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평화당 장병완, 무소속 정태욱 의원도 함께 한다. 정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공개적으로 소위 배정을 요청했는데 조정이 안 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무위 입장에서 (정의당의) 소위 포함이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장을 찾은 것에 대해 추 의원은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완화)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소위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열띤 토론'

김희수 전북도의원
조례제정 위한 간담회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통해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활성화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지난 23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및 각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과 14개 시군 관련 담당자, 14개 교육지원청 관련 담당자,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조례안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발제를 맡은 진안 백운초등학교의 인종만 교사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통해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활성화

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교육적 요구와 실천, 지역사회 교육력 강화,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단기적 성과가 아닌 문화적 변화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교육 등을 강조했다.

토론과정에 참여한 마을교육생태계관련 현장 활동가들은 '마을교육이 성장해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도청과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3일 시작되는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은산분리 완화 논의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다.

“도심 차량 속도 제한 강화해야”

신창현 의원, 개정법안 발의

2022년까지 사망자수 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사진) 의원은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와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4,000명 이상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줄어들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지 도달 시간이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뉴시스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 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토)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예문화촌 등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